

# 자민당과 종교적 동원

: 통일교 사례를 중심으로

손석의 \_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 목 차

- I. 서론
- II. 자민당 조직과 종교적 동원
- III. 누가 통일교를 필요로 하는가?
- IV. 정책 선호의 유사성
- V. 결론

## 국문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 발생 후 불거진 통일교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민당과 종교적 동원의 합리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통일교’와의 관련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민당과 ‘중간 단체’로서의 종교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의 역학에 대해 살펴봤다.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자민당 의원에게 잠재적 고정표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선거구 차원에서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착 관계는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일원적 관계로 형성되기보다는 개인 후보와 종교단체 사이의 ‘비공식적 제도(informal institution)’를 통해서 형성된다.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의원들 사이에 파벌적 특성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지지기반이 취약한 후보들일수록 대거 관련성을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종교단체’를 받아들여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았던 점이 이러한 ‘느슨한’ 관계가 ‘개인’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 지향을 살펴봐도,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자민당 후보와 자민당 내의 다른

후보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자민당 후보의 정책 선호와 통일교가 제시한 정책 제안 간의 유사성은 일정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들의 영향력이 자민당 후보의 정책 선호 형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는 않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자민당과 통일교와의 연대는 2009년 실각 이후 자민당과 개인 후보들이 기존의 지지기반을 재건할 필요성에 직면하면서 강화된 것이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연원이 오래된 '정책'보다 선거협리성을 우선시하는 경쟁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주제어

일본 자민당, 통일교, 종교적 동원, 선거 동원

---

## I.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통일교<sup>1)</sup>의 사례를 중심으로 자민당과 종교적 동원의 합리성을 살펴보는 데 있다. 2022년 7월 8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총격 사건 발생 후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유착 관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이나 야당은 특히 과거 영감상법(靈感商法) 등 종교 비즈니스를 전개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구·통일교회(旧統一教會, 이하 통일교)의 도덕성을 문제 삼으며,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와 통일교의 창립자인 문선명(文鮮明) 간에 '승공(勝共)연맹'이 이루어진 배경 등에 초점을 맞추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현재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인 세이와카이(清和會)와 통일교의 긴밀한 관계가 보도되고 있으며 특정 종교단체가 자민당 및 일본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일교와 자민당의 관계에 대해, 과거 '반공' 이념을

---

1) 일본 언론에서는 구통일교회(旧統一教會) 혹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世界平和統一家庭連合)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소개되지만, 본 논문에서는 한국 언론에서 주로 사용하는 '통일교'로 통합하였다.

중심으로 맺어진 일본의 전후 우파 세력과의 유착 관계 및 통일교가 일부 자민당 의원의 선거 운동에 관여한 사실 등을 밝혀낸 바 있다. 아사히신문은 통일교가 동원할 수 있는 조직표를 세이와카이에서 직접 관리했다며, 양 세력을 연결한 것은 우파 사상이라는 자민당 관계자의 발언을 신기도 했다.<sup>2)</sup> 또한 2022년 8월 7일 기사에서는 통일교의 선거 협력으로 참의원 의원 두 명의 당락이 뒤바뀐 사례를 보도하며, 아베 전 총리를 매개로 한 통일교와의 협력 관계의 메커니즘을 밝히기도 했다.<sup>3)</sup>

자민당, 특히 아베파와 통일교 간의 ‘불온한’ 관계에 대한 단편적인 묘사는 전후 일본 정치사회에서 형성된 정치와 종교 간의 모호한 관계성을 반영한다. 국가 신도에 의한 ‘정교일치’체제가 파국을 초래하자 전후 일본 사회에서 종교와 정치는 완전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급격히 확산되었다. 특히 전후의 진보적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특정 신앙 체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기초로 하는 ‘종교’는 ‘주체성이 확립된 개인’이 형성해야 하는 ‘국민국가’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종교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다.<sup>4)</sup> 다시 말해 이들은 ‘민주주의’와의 호환성을 둘러싸고 종교에 비판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근대화론적 관점에서 종교적 가치는 민주화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하는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후 일본에서 종교는 다양한 형태로 정치에 관여해 왔다. 패전 후 국가 신도의 해체 직후인 1946년 2월 종교법인으로 재출발한 신도본청(神

2) 「自民党と旧統一協会、共鳴の半世紀：岸信介首相から続く歴史」, 『朝日新聞デジタル』, 2022.8.6.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865F5CQ82UTFK01L.html> (검색일: 2022.11.10).

3) 「『10万票を切ることはない』旧統一教会が支えた安倍派候補」, 『朝日新聞デジタル』, 2022.8.7.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86728DQ85UTIL04X.html> (검색일: 2022.11.10).

4) 小熊英二, 「『民主』と『愛国』—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2, pp.70~73.

道本廳)은 1951년 기원절부활운동(紀元節復活運動)을 시작으로 야스쿠니신사 국가호지(國家護持)운동(1956년-), 원호법제화(元号法制化) 운동(1960년대-) 등 종교적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계와의 관계를 유지해 왔다. 나아가 1969년 11월 신도정치연맹(神道政治聯盟)이 공식 출범함에 따라 “신정연의 취지에 찬동하는 국회의원을 조직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인 선거 지원에 나서기 시작했다.<sup>5)</sup> 그뿐만 아니라 창가학회는 1954년 지방 선거를 시작으로 1955년에는 본격적인 ‘정치 진출’에 성공하였고 1964년에는 공명당이 결성되어 오늘날 자민당의 연합 파트너로서 정권 운영 및 선거 현장에서 긴밀한 협력 체제를 형성,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전후 일본에서 종교가 정치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근대화가 진행될수록 정치에서 종교적 가치의 중요성이 축소된다는 세속화론(secularization theory)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다. 세속화론자들은 경제가 발달한 근대사회일수록 종교적 가치는 축소되며 전통적인 종교적 사회 균열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 역시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sup>6)</sup> 반면, 이러한 근대화론적 접근에 대한 반박으로 종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의 지속성 및 다양성을 제시하는 연구가 다수 등장했다. 잉글하트와 베이커는 근대화가 초래하는 압도적인 경제성장과 사회경제적 변화는 종교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에 변화를 유도한다고 지적함과 동시에, 그 ‘변화’의 정도와 경로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경제공황과 체제의 붕괴와 같은 급속한 사회적·경제적 불안정성 증가는 종교 및 전통적 가치를 되살리는 경우도

---

5) 塚田穂高, 『宗教と政治の転軸点 保守合同と政教一致の宗教社会学』, 花伝社, 2015, p.44.  
 6)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J: Doubleday, 1967). David Martin, “Notes towards a General Theory of Secularis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10-2(1969).

있다고 주장했다.<sup>7)</sup> 또한, 종교와 내셔널리즘과의 관계성에 대해 ‘세속화 없는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근대사회의 종교적 권위의 다원화(pluralism)가 지적되기도 했다.<sup>8)</sup> 실제로 근대화의 단계를 불문하고,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도 ‘종교적 투표(religious voting)’의 비중이 여전히 중대하다는 점<sup>9)</sup>과, 보수정당 역시 이러한 ‘전통적’ 가치를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하나의 통로로 여기고 전략적으로 활용해 온 사례도 지적됐다.<sup>10)</sup>

이러한 맥락에서 자민당과 통일교의 관계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본고에서는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관계를 ‘종교적 동원(religious mobilization)’의 관점에서 고찰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왜 일부 자민당의원들이 통일교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해 왔는지에 대해 자민당의 정당 조직적 요인, 나아가 선거 합리성에 비추어 그 이유를 살펴보겠다. 통일교와 자민당 의원 간의 연관성을 조사하기 위한 자료는 많지 않지만 2022년 8월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국회의원 실태조사 중 자민당 소속 의원들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하고자 한다. 해당 조사는 네 가지 질문에 대해 ‘네’, ‘아니요’, ‘모름’ 중 한 가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국회의원 712명 중 635명이 응답하였다(응답률 89.1%).<sup>11)</sup> 본 논문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우선 다음 절에

---

7) Ronald Inglehart and Baker E. Wayne,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1), (2000).

8) Jeremy Menchik, “Beyond Secular Democracy: Religion, Politics, and Modernit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0(2018).

9) Geoffrey Layman and Edward G. Carmines, “Cultural conflict in American politics: religious traditionalism, postmaterialism, and US political behavior,” *Journal of Politics* 59-3 (1997).

10) Christopher Raymond, “The continued salience of religious voting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Electoral Studies* 30-1 (2011).

11) 2022년 8월말 기준. 이후에 추가로 설문조사에 응한 의원이 있어 본 논문 작성 시

서 선거 동원에 있어 종교단체가 일종의 ‘중간 단체’로 작동한 배경에 대해 자민당의 정당조직적 특징에 주목하여 살펴보겠다. 자민당 의원과 통일교 간의 관계를 ‘느슨한 개개인 간의 연대’로 규정하여,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제3절에서는 자민당 의원 중 통일교와의 관련을 인정한 이들의 지지기반의 취약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겠다. 제4절에서는 통일교와 자민당 의원들 사이에 어떠한 정책적 유사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해 분석하겠다.

## II. 자민당 조직과 종교적 동원

### 1. 자민당 조직의 특징과 개인 중심적 선거 전략의 유익성

정당 조직의 형태는 당내 의사 결정뿐만 아니라 소속 의원의 선거 동원 역학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강한 중앙집권적 정당 조직을 특징으로 하는 대중정당(mass party)에 소속된 의원은 지지를 동원할 때에도 개인이 가진 자원보다는 조직의 동원력에 의존하기 때문에 조직에 대한 ‘대표성’, 즉 충성도 역시 높다. 반면 보수정당의 원천으로 분류되는 간부정당(cadre party)은 각 지역의 자산가나 유력자와 같은 개인 자원이 풍부한 이들이 모여 형성된 정

---

점(11월중순)의 수치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본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시히신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93632WQ93ULZU00M.html?iref=special\\_unificationchurch-survey](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93632WQ93ULZU00M.html?iref=special_unificationchurch-survey). 네 가지 설문은 아래와 같다.

- (1) 구·통일교회(旧統一教會)나 관련 단체로부터 운동원 파견 등 선거 지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2) 구·통일교회나 관련 단체, 관계자로부터 현금을 받거나 이들이 파티권을 구매한 적이 있습니까
- (3) 구·통일교회나 관련 단체의 행사에 회비를 지출한 적이 있습니까
- (4) 구·통일교회나 관련 단체가 주최한 행사와 관련하여 출석·축사·축전 등으로 관련한 적이 있습니까

당인 만큼 선거 운동을 할 때에도 정당 레벨에 의존하기보다 개인의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지지 동원에 나선다. 즉 전자에 비해 정당 조직이 분권화되어 있는 것을 그 특징으로 볼 수 있으며 선거에서 조직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만큼 정당 규율 역시 취약한 편이다.

소위 55년체제 시절의 일본 자민당은 당시 제1야당이었던 일본사회당에 비해 대체로 분권적 특징을 가진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1955년에 자유민주당이 결성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지향이나 지지기반이 일치하지 않은 다섯 개 정도의 파벌이 집결함에 따라, 당 지도부보다 각 파벌의 영향력이 강력했다는 점이다. 결성 당시 자민당은 내부에서조차 “5년도 채 못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내부 경쟁이 심각했고, 1960년대 이후 정권 운영이 안정화되고 당내의 조정 메커니즘이 정착된 이후에도 내각 구성이나 공천과 같은 당의 중요 결정 과정에 파벌의 힘이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자민당이 분권적 특징을 가지게 된 두 번째 요인은 선거제도이다. 즉 하나의 선거구에서 3~5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中選舉區制) 하에서는 자민당 의원들이 서로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이들이 ‘자민당’이라는 정당 레벨에 의존하기보다 상대와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기업이나 중간 단체를 중심으로 개인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지지 동원에 나섰다. 나아가 일반 유권자 역시 개인 후원회를 통해 의원(후보자) ‘개인의’ ‘고정표’를 형성했고, 이들은 ‘자민당’의 정책이 아닌 특정 ‘후보’에 대한 친밀감, 애착 등을 이유로 투표용지에 그의 이름을 적었다.<sup>12)</sup> 이러한 당내 경쟁으로 인한 ‘개인 중심적’ 선거 동원은 ‘정책이 없는 선거’의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1990년대 정치개혁 당시 이익

---

12) Gerald L. Curtis, Election Campaigning Japanese Style, (New York: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유도형 정치와 함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소선거구(중심적)제도 도입이 ‘개인 중심적’ 선거 동원과 파벌 정치에 중지부를 찍을 것이라는 예측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오오타케(大嶽)는 개인 후원회를 통한 지지 동원의 비중은 후보마다 차이가 존재한 다면서도 선거제도 개혁 이후 시행된 1996년 총선 당시의 선거 운동을 분석한 결과, 개인 후원회에 대한 의존도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논했다.<sup>13)</sup> 박철희(朴喆熙) 역시 1996년 총선 당시 도쿄17구에 출마한 히라사와 가쓰에이(平沢勝栄) 자민당 후보의 선거 전략을 관찰하여 개인 후원회의 역할이 일부 변화하였으나 그 중요성은 여전히 막대함을 제시했다.<sup>14)</sup> 그 이유는 우선 선거구에서 30% 내외의 득표를 달성하면 당선이 유력시되던 중선거구제와 달리, 소선거구제에서는 가능한 많은 지지를 동원해야할 필요성이 생겼다. 두 번째로, 새로운 선거제도에서 당내 경쟁은 소멸했으나 야당 세력의 집결이 일어남에 따라 정당 간 경쟁이 치열해졌다. 세 번째로 자민당의 지방 조직이 가진 취약성이다. 이전 선거제도 하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원 간 소위 계열(系列)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지방 정치인 간의 협력 관계가 성립되었던 만큼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의 개인 후원회는 자민당의 자원이 아닌 개인 자원의 성격을 강하게 지녔다. 지지 동원이나 ‘표 모으기(票固め)’에서의 개인주의는 자민당의 당조직이 근대화(=중앙집권화)에 실패하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지목되어 왔다.<sup>15)</sup> 야마다(山田)는 이바라키2구에 출마한 누카가 후쿠시로(額賀福志郎)의 선거 전략을 분석하여 선거제도 개혁 이전에는 국정 선거에서 “아무 활동도 하지 않았던” 이바라기현 자민당 지부연합회가 1996년 총선에서

---

13) 大嶽秀夫, 「第3章 都市圏における個人後援会の変容と再編」 大嶽秀夫編 『政界再編の研究—新選挙制度による総選挙』 有斐閣, 1997.

14) 朴喆熙, 『代議士のつくられかた—小選挙区の選挙戦略』 文春新書, 2000.

15) 中北浩爾, 『自民党政治の変容』 NHKブックス, 2014.

는 자민당 의원에 투표를 호소하는 ‘우호단체·지부대표자 합동회의’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 호소에 나섰다<sup>16)</sup> 즉 당내 경쟁이 소멸하자 누카가 후보와 같은 유망 정치인에게 적극적인 지지 활동을 어필하면서 장래의 협조를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러한 현련(縣聯)의 태도 변화는 지방의원의 자율성을 훼손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협력’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지지의 규모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보았다. 결국 본인이 소속된 정당의 지방조직보다 “개인의 후원회만이 가장 지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sup>17)</sup>

반면, 2003년 이후 민주당의 부상과 매니페스토 선거의 등장,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이 강행한 우정 해산(郵政解散) 선거, 그리고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2009년 선거 등의 결과는 개인 중심적 정치 시대의 종말과 ‘정책 중심적’ ‘양당제’의 정착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지배적이 되었다. 마치도리(待鳥)는 2003년 이후 유권자의 투표 행동은 ‘개인 투표’에서 ‘정당 투표’로 서서히 변해왔다면서 고이즈미 칠드런(小泉チルドレン), 오자와 겔즈(小沢ガールズ), 아베 칠드런(安倍チルドレン)과 같은 사회적 현상을 거론하며 당 대표에 대한 평가가 신인 후보자 다수의 당락과 직결되는 현상에 대해 논했다.<sup>18)</sup> 특히 제2기 아베 내각 시기(2012-2020)에는 관저 주도의 정치가 강화되고, 자민당 내부에서도 당 지도부가 집권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등 일본 정치가 ‘대통령제화(presidentialization)’ 되었다는 지적이 있다.<sup>19)</sup>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2003년, 2005년, 2009년 총선에서

16) 山田真裕, 「第4章 農村型選挙区における政界再編および選挙制度改革の影響ー茨城新2区、額賀福志郎を例として」大嶽秀夫編『政界再編の研究ー新選挙制度による総選挙』有斐閣, 1997

17) 山田真裕(1997), pp.128~131.

18) 待鳥聡, 『政治改革再考ー変貌を遂げた国家の軌跡』, 新潮選書, 2020, p.120.

19) Willy Jou and Endo Masahisa, “Presidentialization of Japanese Politics?”

조직되지 않은 유동층의 투표 동향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 경험으로 인해, ‘당의 얼굴’의 중요성이 확대되었고, 선거에서의 승리는 바로 총재와 당 지도부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메커니즘이 정착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공천 결정권을 당 지도부가 독점하는 상황에서 개인 후보의 자율성 역시 축소될 수밖에 없고 ‘개인’ 중심적 선거의 유익성 역시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 2. 중간 단체로서의 종교단체 동원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한 가지 의문을 남긴다. 즉 2005년 및 2009년 총선 결과로 일본 선거 경쟁에 대한 전반적인 변화를 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두 선거는 예외적으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고, 이로 인한 한쪽 쏠림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여야를 불문하고 ‘조직되지 않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당 지도부의 이미지 전략이 중요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러한 새로운 경향으로 인하여 기존의 ‘표 모으기’ 활동이 가지는 중요성이 축소되었음을 제시하는 증거는 없다. 중견 이상의 의원들이 이미 구축해 놓은 개인 후원회를 소홀히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을뿐더러, 신인 후보 역시 본인의 취약한 지지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비공식 선거 활동을 공식 선거기간 이전부터 진행할 것이다. 특히 2012년 이후 투표율 저하는 유동층의 선거 불참을 시사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의 이미지 전략에만 의존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인식할 것이다.

이처럼 개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후원회를 비롯한 개인 네트워크를 양성하여 고정적인 지지기반을 마련하려는 인센티브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때 종교단체가 일종의 ‘중간 단체’ 혹은 ‘이익단체’로서 정치인의 네트워크에 흡수

---

Examining Political Leader Evaluations and Vote Choice,”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3), (2015).

됐다는 지적이 있다. 일본에서의 종교적 동원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종교단체가 위와 같은 ‘이익단체’적 유익성 때문에 동원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클라인(Klein)은 정당이 종교단체로부터 정치적 지원을 받는 이유로 조직표, 자금, 그리고 인원 세 가지를 제시했다.<sup>20)</sup> 즉 정치인은 다양한 통로를 통해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연계는 고정표 획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전히 유익하다는 인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클라인과 리드(Klein and Reed)는 종교단체의 조직력이 일본에서 치러지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우 과소평가해 왔으며 정당을 조직한 창가학회뿐만 아니라 입정교성회(立正佼成会), 생장의집(生長の家) 등 다양한 교리 체계를 갖는 종교단체들이 정치와 선거에 관여해 왔음을 논했다. 특히 전국에서 1% 정도의 득표율만으로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참의원 전국 비례대표제 선거에서 종교단체가 후보를 내세운 경우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sup>21)</sup>

중요한 것은 종교단체에 의한 선거 지원은 대부분 ‘개인 중심’적으로 동원된다는 점이다. 즉 종교단체가 특정 정당을 전체적으로 지지하기보다 ‘개인 후보’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협력에 나서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는 양쪽의 합리성이 존재한다. 우선, 정교(政教)분리의 원칙에서 볼 때, 자민당이 특정 종교단체와의 관계를 공식화할 때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교리나 조직의 규모, 지리적 특징이 다양한 여러 종교단체로부터 폭넓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비공식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협력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두 번째로, 종교단체로서도 개인 후보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편이 정책 협정을 비롯한 지원에 대한 대가를 받아 낼 때 더욱 유리하다. 개인 후

20) Axel Klein, “Twice Bitten, Once Shy: Religious Organizations and Politics after the Aum Attack,”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9-1(2012).

21) Axel Klein and Steven Reed, “Religious Groups in Japanese Electoral Politics,” in George Ehrhardt, et. al. (eds). *Komeito: Religion and Politics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26-27.

보는 종교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직접 선거 활동에 임해야 하고, 당선이 위태로운 후보일수록, 즉 종교단체의 지원이 필수적인 후보일수록 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바꾸어 말하면, 종교단체 역시 당선이 유력한 후보보다는 개인 지지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신인 후보나 낙선 경험이 있는 후보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강한 유착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거 협력을 이어 온 자민당과 공명당·창가학회이지만, 선거 때마다 자민당 후보는 각 지역구의 공명당·창가학회에 추천지원서를 제출하고, 이를 선거구와 도도부현, 중앙 차원에서 총 세 번의 ‘심사’를 통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는 국정 운영에 있어 ‘을’인 소수정당이 선거구 차원에서 ‘사은을 입히는데’ 매우 효과적이고, 나아가 선거구 단위로 후보에 대한 검증을 진행함으로써 조직 내의 불화를 최소화하는데 핵심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sup>22)</sup>

다시 말해, 일종의 ‘중간 단계’적인 성격을 가진 종교단체의 선거 동원은 ‘자민당’에 대한 정당 차원에서의 협력 관계라기보다 개별 후보가 스스로 발굴해야 하는 잠재적 자원에 가깝다. 이러한 협력 방식으로 인해, 종교단체와 집권 여당 간의 ‘연대’를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통일교만의 특징이라고 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공명당을 제외하면 종교단체의 정치 진출은 대부분 실패해 왔으며, 이들은 독자적인 정당을 조직하기보다는 개인 정치인이나 정당을 ‘후원’함으로써 정치적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 왔기 때문이다.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의 정치 참여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

22) Sohn Sukeui, “Sustaining Coalition through Adaptive Electoral Alliance: Kōmeitō’s local adjustment mechanism in electoral cooperation with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6–2 (2019).

또 다른 이유는 종교단체에 의한 선거 지원이 ‘개인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그 지원의 형태와 강도,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종교단체의 ‘관련 단체’로 불리는 여러 조직이, 본래의 종교단체 명칭과는 다른 별도의 조직명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통일교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진’ 단체만 하더라도 천주평화연합(天宙平和聯合), 세계전략종합연구소(世界戰略總合研究所), 세계평화연합(世界平和聯合), 그리고 대학 캠퍼스 동아리인 원리연구회(原理研究會) 등 다양하다. 게다가 개인 후보에게 접근할 때, 이러한 ‘단체명’을 제시하여 활동에 나서는 경우도 있지만, 선거 운동원으로서의 활동은 신자 개인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그 인물의 ‘신상’에 대해 따질 필요성이 크지 않다. 실제로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전 자민당 간사장은 “응원해주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잘 부탁드린다고 답하는 게 정치인으로서 당연한 것”이라며 “응원해 줄 사람을 선택할 권리는 우리에게 없다”, “문제가 발생하면 재고하면 된다”고 발언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다. 그의 발언은 자민당 후보들의 선거 활동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자민당 후보는 늘 지지자 발굴에 매진할 필요가 있으며 ‘누가’, ‘왜’ 본인을 지지하는 것인지, 혹은 어떤 집단체에게 어떤 정당성을 제공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것인지는 2차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통일교와의 깊은 관계가 보도된 호소다 히로유키(細田博之) 중의원 의장은 본인의 선거 운동에 통일교 관련 인원이 참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것은 본인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통일교와 관련된 ‘개인’에 의한 ‘자발적인’ 지원이었다고 변명하기도 했다.<sup>23)</sup> 통일교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사실이 알려진 기하라 세이지(木原誠二) 관방부장관 역시 10월 28일 중의원 내각위원회에서 “과거 4번의 선거 활동을 통해 받은

23) 「細田衆院議長 旧統一教会関係団体と関係 会合やインタビュー」『NHK政治マガジン』, 2022, 9, 29.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89805.html> (검색일: 2022.11.20.).

추천서는 1,000개에 달한다”며 그 중 하나를 세계평화연합 측이 ‘자발적으로’ 가져왔던 것이라고 변명했다.<sup>24)</sup> 다시 말해, 자민당 후보들은 통일교와 같은 비교적 소규모 집단이라 하더라도 잠재적 ‘후원 인력’으로 인식하여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들의 지원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자민당 의원들의 문제의식이 희박한 이유는 ‘자민당과 종교단체’ 사이에 성립된 협력 관계가 아닌, 개인 후보와 개인 신자 간의 관계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니카이 간사장의 발언이 시사하는 또 다른 점은 지지자와 자민당 후보 사이에 일종의 연계성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정책적, 혹은 이념적 근접성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 유세나 정책 어필과 달리, 자민당 개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지를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의 필요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과거 국정 선거에서 지지하는 개인 후보들과 ‘추천 확인서’의 명목으로 ‘정책 협정’을 맺었다는 보도가 있다. 이에 대해 단체 관계자는 “평화연합의 독립적인 의사에 따라 정치 신조가 일치하는 개개인의 정치가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정책 협정’이라는 지적에 대해 “구속력이 없다”라고 해명했다.<sup>25)</sup> 실제로 이 ‘추천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알려진 오오구시 마사키(大串正樹) 디지털부대신은 2021년 중의

---

24) 「木原官房副長官 旧統一教会の関連団体から推薦状受領で陳謝」『NHK政治マガジン』, 2022. 10. 28.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91247.html> (검색일: 2022.11.20.).

25) 「旧統一教会の関連団体 自民党議員と「推薦確認書」取り交わす」『NHK政治マガジン』, 2022.10.20.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90805.html> (검색일: 2022.11.20.).

원 선거 당시 통일교의 관련 단체와 ‘추천 확인서’를 교환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내용에 대해 “헌법개정에 힘을 쓰겠다는 등 자민당의 정책과 가까운 것이었다고 기억한다.”라고 답했다.<sup>26)</sup> 4선 의원인 사이토 히로아키(齋藤洋明) 의원은 “대략적으로 (정책의) 방향성이 확인되어 서명했다.”라고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정책 추진에 영향을 준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sup>27)</sup> 기시다 총리 역시 “한 의원에 대한 접근이 자민당의 정책 결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이 아니”라며 선거에서 통일교와의 접근이 국가 정책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상의 보도와 발언을 종합해 보면, 중간 단체로서의 ‘통일교’와 자민당 개인 후보와의 관계가 형성 및 유지되는 배경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우선, 자민당 소속의 ‘개인’ 후보는 통일교와 이에 관련된 단체를 잠재적 고정표로 인식하고, 종교단체로부터 제공되는 표를 발굴하기 위해 이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그러한 ‘유착’ 관계가 지속되는 이유는 종교단체라는 통일교와 그 관련 단체의 특성상 관계를 유지하는 데 드는 정치적 비용이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 논하겠지만 정책 추진을 선거 지원의 ‘대가’로 요구한다고 해도 통일교가 ‘바라는’ 정책은 헌법개정과 같이 개인 후보가 지역구 활동의 일환으로 달성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나아가 후보가 ‘대가’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통일교가 이를 효율적으로 ‘징벌’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26) 『大串デジタル副大臣 旧統一教会関連団体「推薦確認書」に署名』『NHK政治マガジン』, 2022.10.26.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91142.html> (검색일: 2022.11.20.).

27) 『旧統一教会の関連団体 自民党議員と「推薦確認書」取り交わす』『NHK政治マガジン』, 2022.10.20.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90805.html> (검색일: 2022.11.20.).

다시 말해 지역구 차원에서 형성되는 자민당 개인 후보와 중간 단체로서의 통일교 (및 관련 단체)와의 관계는 ‘개개인 간에’ 형성되는 느슨한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 절에서는 아사히신문의 조사를 토대로 통일교와 관련을 인정한 자민당 의원들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다.

### Ⅲ. 누가 통일교를 필요로 하는가?

#### 1. 파벌 및 당선 횟수별 특징

통일교와의 관련이 확인된 자민당 의원들에게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절에서는 아사히신문 조사를 토대로 그 실태를 살펴보겠다. 우선 <표 1>은 아사히신문 조사에서 네 가지 항목 (선거 지원, 현금, 회비, 축전) 중 한 개 이상의 질문에 ‘네’라고 답한 의원을 파벌별로 나타낸 것이다. 중의원의 경우 설문 조사에 응한 262명의 의원 중 33.2%인 87명이 관련을 인정했는데, 그 비율은 스가 그룹이 13명 중 7명(53.8%)으로 가장 높다. 뒤를 이어 아소파(39.5%), 아베파(38.3%), 기시다파(36.4%) 순이다. 참의원 의원의 경우 26.9%가 관련을 인정했는데 파벌별로 보면 (이시바파를 제외하면) 기시다파(38.5%), 니카이파(33.3%), 아베파(28.2%), 모테기파(27.3%), 아소파(26.7%) 순이다. 다시 말해, 당내 최대 파벌이자 통일교와의 관련성이 보도된 아베파 못지않게 아소파, 기시다파, 니카이파와 같은 주요 파벌 소속 의원들도 통일교와의 관계에 있어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는 세이와카이와 통일교의 역사적 유착관계만이 강조되어 온 것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자민당 의원들이 통일교에 접근하는 데 있어 의원의 소속 파벌은 무관함을 시사한다.

〈표 1〉 파벌별 통일교와 관련성을 인정한 자민당 의원

파벌명	중의원			참의원		
	관련 인정	총수	%	관련 인정	총수	%
아베	23	60	38.3%	11	39	28.2%
모테기	9	34	26.5%	6	22	27.3%
아소	15	38	39.5%	4	15	26.7%
기시다	12	33	36.4%	5	13	38.5%
니카이	11	34	32.4%	3	9	33.3%
모리야마	2	6	33.3%	0	1	0.0%
이시바G	2	8	25.0%	1	1	100.0%
다니가키G	1	11	9.1%	0	1	0.0%
스가G	7	13	53.8%	0	7	0.0%
무소속	5	25	20.0%	2	11	18.2%
계	87	262	33.2%	32	119	26.9%

\*(2022년 당시) [아사히신문 조사를 토대로 필자 작성]

다음으로 통일교와의 관련을 인정한 의원들의 당선 횟수를 살펴본 것이 〈표 2〉다. 우선 눈에 띄는 점은 초선 의원의 비율이다. 참의원의 경우 초선 의원이 11명으로 가장 많은 숫자를 나타냈다. 중의원의 경우 초선 의원이 18명으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고, 이는 4선 의원의 30.7%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경향에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첫째, 지지기반이 취약한 ‘신인 후보’일수록, 통일교와 같은 ‘중간 단체’를 개인 후원회로 흡수하는 데 큰 저항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15년 통일교가 ‘세계 평화통일가정연합’으로 개칭한 후 ‘통일교’와의 관련성 검증이 허술해졌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자민당 위기’와 종교적 동원의 관련성이다. 중의원의 경우 4선 의원의 비율이 30.7%로 가장 높는데, 이들은 (낙선 없이 연속으로 당선되어 왔다는 가정하에) 2012년 민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한 선거에서 아베 총재가 이끄는 자민당의 ‘신인 후보’로 출마하

〈표 2〉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의원의 당선횟수

중의원			참의원		
당선 횟수	의원 수	%	당선 횟수	의원 수	%
1	18	20.5%	1	11	34.4%
2	5	5.7%	2	9	28.1%
3	4	4.5%	3	8	25.0%
4	27	30.7%	4	2	6.3%
5	12	13.6%	5	1	3.1%
6	10	11.4%	6	0	0.0%
7	2	2.3%	7	1	3.1%
8	2	2.3%			
9	2	2.3%			
10	1	1.1%			
11	1	1.1%			
12	1	1.1%			
13	3	3.4%			

\*[아사히 신문 조사를 토대로 필자 작성]

였을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해 실각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빠진 자민당이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신인 후보를 대거 선정했고, 이들이 선거 운동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중간 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베 총재가 자민당 내 결정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자민당을 ‘살리기 위해’ 정치 자금이나 선거 운동에 있어 종교단체를 동원할 때의 문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크다.

## 2. 지지기반의 취약성과 종교적 동원

그렇다면 어떤 ‘관련성’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표 3). 119명의 의원이 통일교 관련 단체와 1개 이상의 접점이 있음을 인정했는데, 그 중

www.kci.go.kr

〈표 3〉 통일교와의 관련성 조사 결과 (자민당)

		선거지원	헌금	회비	축전	계
중의원	선거구	15	9	18	78	120
	비례 단독			4	6	10
	계	15	9	22	84	130
참의원		5	8	3	30	46
자민당 합계		20	17	25	114	176

\*[아사히신문 조사를 토대로 필자 작성]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축전(祝電)’이며 114명이 “통일교나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출석, 축하, 혹은 축전 등으로 관여한 바 있다”라고 답했다(비서가 대리 출석한 경우도 포함). 중간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 개인 후보가 축전을 보내거나 직접 참여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선거 운동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야마구치 쓰요시 환경대신은 축전을 보냈을 당시 통일교와의 관계에 대해 알 길이 없었다며 “부탁을 받으면 다 (축전을) 보낸다”고 말하여 비판을 받기도 했다.<sup>28)</sup> 다음으로 ‘회비 지출(25명)’, ‘선거 지원(20명)’, ‘헌금 수령(8명)’ 순으로 응답하였다. 본 조사가 자진신고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선거 지원이나 후원금 수수와 같은 사례는 비교적 적다.

한편, 선거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한 중의원 의원 15명 중 5명(33.3%)은 비례부활제로 당선되었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만큼 선거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인데, 이 비율은 자민당 선거구 후보 중 비례부활제로 당선된 비율(20.0%)보다 높다. 물론 이것만으로 통일교의 선거 지원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지기반이 취약한 후보일수록 종교단체를 비롯한

28) 「『山口環境大臣に祝電を頼もう』トレンド入り 旧統一教会イベントに祝電送った事実問われ「頼まれたら全部出す」と笑みを浮かべ発言」, 『東京中日スポーツ』, 2022.8.6. (검색일 2022.11.17.) <https://www.chunichi.co.jp/article/521944>

중간 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 사례로서, 통일교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부활 제도로 당선된 위 5명의 의원에 대해 살펴보겠다<표 4>.

눈에 띄는 것은 이 다섯 선거구 모두 보수 분열이나 강력한 민주당계 후보의 존재로 말미암아 선거 때마다 당선인이 뒤바뀌는, 경쟁이 매우 치열한 선거구라는 점이다. 사이타마6구의 경우 2000년 총선부터 2005년까지 민주당의 오오시마 아쓰시(大島敦)가 연승한 선거구이며, 2012년에 처음으로 나카네 가즈유키 자민당 후보가 선거구에서 이겼지만, 득표 차이는 겨우 200표에 그칠 정도로 야당 후보의 강력한 지역기반이 존재한다. 니이가타1구 역시 민주당의 니시무라 지나미(西村智奈美)가 2003년, 2005년, 2009년 총선에서 승리, 2012년과 2014년에는 자민당 후보에게 의석을 내줬으나 2017년 이후 또다시 연속으로 니시무라가 승리하였을 정도로 민주당계 지지기반이 강력한 지역 중 하나다. 반면 참의원 의원으로 2기 활동한 경력이 있는 쓰카다 이치로(塚田一郎)의 경우, 부친이 니이가타 선거구에서 참의원 3선, 중의원 8선을 지낸 국회의원 출신이며, 본인은 아소 다로 부총리의 비서 출신이기도 한 인물이다. 쓰카다는 연이은 문제 발언과 비서 폭행 의혹 등에도 불구하고 ‘낭인’ 신분이던 2020년에 니이가타1구 지부장(支部長)으로 취임한 바 있다. 니이가타에서 오랫동안 국회의원을 지낸 아버지의 대를 이었으나, 강력한 지연(地緣)에도 불구하고 석패율이 75.8%에 그친 것을 보면, 역시 취약한 지지기반이 종교단체까지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니이가타6구 역시 민주당 소속의 쓰쓰이 노부타카(筒井信隆)가 오랜 기간 지지기반을 단단히 다져 온 지역으로, 2000년 이후 민주당 후보가 선거구에서 줄곧 승리해 왔다. 2003년 부친의 지지기반을 이어받은 다카토리 슈이치(高鳥修一)가 자민당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하였고,

〈표 4〉 통일교로부터 ‘선거 지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부활제도 당선인 (2021년 총선)

선거구	중복 블록	후보 명		당선 횟수	첫 당선 년도	파벌	석패율
사이타마6	기타간토	나카네 가즈유키	中根一幸	5	2005	아베	78.5% (6)
사이타마12	기타간토	노나카 아쓰시	野中厚	4	2012	모테기	95.6% (1)
가나가와12	미나미간토	호시노 쓰요시	星野剛士	4	2012	스가	95.9% (1)
니이가타1	호쿠리크신에쓰	쓰카다 이치로	塚田一郎	1	2021	아소	75.8% (4)
니이가타6	호쿠리크신에쓰	다카토리 슈이치	高鳥修一	5	2005	아베	99.8% (1)

2005년 우정 선거 당시에도 선거구에서 패배하였으나 석패율 89.6%를 기록하여 비례 부활을 통해 처음으로 당선되었다. 2012년, 2014년, 2017년 총선에서는 선거구에서 연이어 승리했지만, 2017년의 경우 상대 후보였던 우메타니 마모루(梅谷守)의 석패율이 97.7%에 달할 정도로 접전이 펼쳐졌다. 이는 공산당이 쓰쓰이의 뒤를 이어 민주당계 무소속 후보자로 나선 우메타니와 선거 연대를 성사시킨 결과였다. 그리고 2021년 총선에서는 반대로 다카토리가 선거구에서 100여 표 표차로 낙선 후 비례 부활을 통해 가까스로 당선되는 등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이다.

가나가와12구는 자민당과 민주당, 사회민주당이 치열한 삼파전을 펼쳐 온 지역이다. 2003년 총선부터 2012년 총선까지는 민주당과 자민당 후보가 선거구에서 번갈아 승리했으며, 사회민주당 후보인 아베 도모코(阿部知子)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6번이나 연속으로 비례부활제를 통해 당선되기도 했다. 2017년 이후로는 아베 도모코가 입헌민주당 소속으로 두 번의 총선에서 당선되었다.

마지막으로 사이타마12구는 앞서 언급한 네 선거구와는 달리 자민당 내의 분열이 선거구 경쟁을 격화시킨 사례다. 역사적으로 자민당이 강력한 지역이지만 2012년 노나카 아쓰시(野中厚)가 연속으로 공천을 받게 되자 이에

반발한 사이타마 내의 자민당 분파인 ‘구마카이파’의 지지를 얻은 모리타 도시카즈(森田俊和)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보수 분열 선거가 펼쳐졌다. 이 선거에서 낙선한 모리타는 2014년 총선에서는 차세대당 후보로, 또 2017년에는 희망의당 후보로 출마하였으며, 2017년에는 석패율 99.4%를 기록하여 최초로 당선되었고, 공산당과의 선거 협력이 이루어진 2021년에는 선거구에서 노나카를 4,000표차로 앞섰다.

〈표 5〉 자민당 선거제도별 당선자 중 통일교와 관련된 의원 수

	총 후보수	당선자수	통일교와 관련	당선자수 대비 비율%
선거구 당선	280	190	58	30.5%
비례 부활		56	24	42.9%
비례 단독	59	16	6	37.5%
계	339	262	82	31.3%

\*[아사히신문 조사를 토대로 필자 작성]

비록 한정된 사례이기는 하지만, 위 결과는 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일수록 자민당 후보들이 모든 선거 자원을 동원하는 ‘총력전’을 펼치면서, ‘종교단체’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5〉는 자민당 당선 의원 중 통일교와 관련된 의원 수를 선거제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비례부활제도로 겨우 당선된 당선자들 중에서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의 비율이 42.9%로 가장 높은 점이 눈에 띈다. 비례 단독 당선자 역시 통일교와 관련된 사람의 비율이 다소 높은데, 이는 비례 단독의 경우 선거구 규모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선거 동원에 있어 중간 단체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나타난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

## IV. 정책 선호의 유사성

다음으로 통일교와의 관련을 인정한 이들의 정책적 지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우선 세계가정평화연합이 일부 자민당 의원들과 ‘교환’했다는 추천 확인서 내용은 다섯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1) 헌법을 개정하여 안정보장체제를 강화할 것, 2) 국회에서 가정교육지원법(家庭教育支援法) 및 청소년건강육성기본법(青少年健全育成基本法)의 제정에 힘을 쓸 것, 3) 동성혼 합법화에 관련해서는 신중할 것, 4) 한일 터널 실현을 추진할 것, 5) 국내외 공산주의 세력 등의 공세를 저지할 것 등이다.<sup>29)</sup> 이러한 통일교의 정책 지향과 자민당 후보의 정책 지향의 유사성을 조사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도쿄대학 다니구치 연구실·아사히신문 공동조사(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의 2021년 중의원 정치가 조사를 이용하겠다. 이 조사는 국정 선거 때마다 실시되었으며, 유효 응답률이 90%를 상회한다. 2021년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조사에서도 1,051명의 후보 중 95.8%인 1,007명으로부터 유효 응답을 받아냈다. 이 중 자민당 후보는 338명이며 조사 내용은 총선에서 중요시하는 정책, 헌법관, 정책 지향, 대외 관계, 선거 전략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본 절의 목적인 ‘통일교와의 정책적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세 가지 이념적 및 정책적 영역에 주목하고자 한다: 1)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친근감을 느끼는 국가 (미국, 한국, 중국, 북한)’에 대한 응답, 2) 국가안보관, 그리고 3) 가족관에 대해서는 정책 지향을 수치로 분석했다. 각 항목에 대한 설문과 응답 방법은 <표 6>에 정리한 바와 같다.<sup>30)</sup>

29) 「旧統一教会の関連団体 自民党議員と「推薦確認書」取り交わす」『NHK政治マガジン』, 2022.10.20.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90805.html> (검색일: 2022.11.20.).

30) 본조사는 해당 홈페이지(<http://www.masaki.j.u-tokyo.ac.jp/utas/utasindex.html#2021>)에서 모든 설문과 응답을 열람할 수 있다. 일반 정책 지향과 관련한 응

〈표 6〉 UTAS 조사 중 분석 대상 설문과 응답 방법

정책 분야	설문	응답 방법
대외 국가관	당신이 친근감을 느끼는 국가는 다음 중 어느 국가입니까? (중략) 3개국까지 선택하세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인도, 중국, 한국, 북한, 없음 중 선택; 0은 '언급 없음,' 1이 '언급 있음'으로 집계됨.
국가안전 보장관	타국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적기지 공격에 나서야 한다.	일반 정책에 대한 질문은 "다음 의견에 대해, 당신은 찬성입니까, 혹은 반대입니까." 1 찬성 2 찬성하는 편이다 3 중립 4 반대하는 편이다 5 반대에서 선택.
	북한에 대해서는 대화보다 압력을 우선해야 한다.	
	당신은 현행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혹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헌법개정) 자위대 보유를 명기한다.	
가족 /성소수자 관	(헌법개정) 집단적 자위권의 보유를 명기한다.	헌법개정과 관련된 설문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후보에 한해 어떠한 내용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16가지 항목 중 항목 수 제한 없이 선택.
	부부가 원하는 경우, 결혼 후에도 각자 결혼 전의 성(姓)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야 한다.	
	남성끼리, 혹은 여성끼리의 혼인을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	
	LGBT 등 성소수자를 둘러싼 '이해 증진'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야 한다.	
	(헌법개정) 가족의 존중이나 가족 간 상호부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먼저 대외국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를 〈표 7〉로 정리하였다. 통일교(세계가정평화연합)가 제시한 정책 제안 중에는 '공산주의 세력의 공세를 저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또 한일 터널 추진 등 한일관계 개선에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후 안보체제의 '반공 연합'을 형성했던 미국과 한국, 그리고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및 북한에 한정하여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을 확인해 보았다. 우선, 통일교와의 관련성이 있는 후보들이 '미국'에 대하여 느끼는 친근감은 자민당의 전체 후보들과 비슷하거나

답 중 [99. 무응답]과 헌법관련 질문 중 [66. 해당 없음]과 [무응답]은 조사에서 제외했다.

〈표 7〉 '친근감을 느끼는 국가' 평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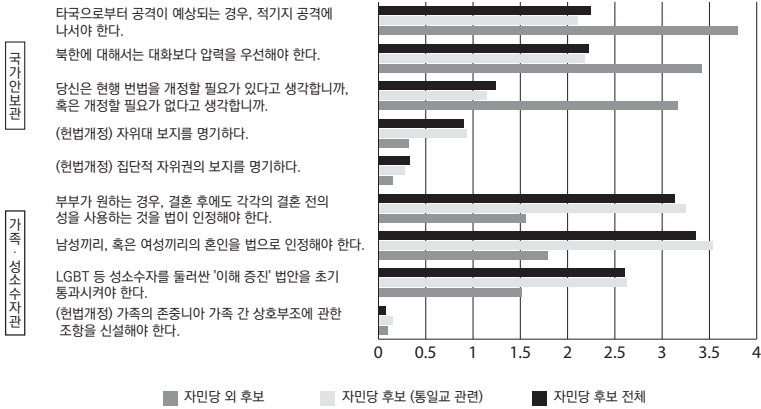
	미국	한국	중국	북한
자민당 후보 전체	0.938	0.062	0.034	0.000
자민당 후보 (통일교 관련)	0.889	0.062	0.062	0.000
자민당 외 후보	0.655	0.123	0.208	0.008

\*(UTAS 2021 조사를 토대로 필자 작성)

다소 떨어지는 반면, 자민당 외 후보들과 비교하면 높은 친근감을 보였다. 한국에 대해서도 역시 자민당 내부의 타 후보들과는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자민당 외 후보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한편, 공산주의체제 국가인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가 매우 드물다. 그런데 중국에 대해서는,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의원들의 경우 친근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자민당 전체 후보들의 평균보다 다소 높았을 뿐만 아니라, 그 수치가 한국에 대해 느끼는 친근감의 정도와 일치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특정 국가의 체제나 이념이 해당 국가에 대한 친근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국가안전보장과 가족에 대한 정책 지향을 살펴보겠다(그림 1). 국가안보에 대한 설문은 일반 질문 2개(적기지 공격 가능 여부 및 북한 정책)와 헌법개정에 관한 설문 중 자위대 및 집단적자위권 보유를 명기하느냐에 대한 견해까지 총 5개이다. 모든 항목에서 자민당 후보와 기타 정당 후보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 반면, 자민당 후보 중 통일교와의 관련이 확인된 후보들과 그렇지 않은 후보들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가족관에 관한 설문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즉 자민당 후보와 기타 정당 후보 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지만, 자민당 내부에서는 정책적 지향의 확연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헌법 개정과 관련하여 '가족의 존중이나 가족 간 상호부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항목에 대해서 전체 자민

〈그림 1〉 2021년 총선 후보의 정책 지향



\*(UTAS조사를 토대로 필자 작성)

당 후보들의 평균에 비해 통일교와의 관련이 있는 후보들이 관심을 보인 비율이 약 두 배에 달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sup>31)</sup>

위의 조사 결과에서 자민당과 기타 정당 후보 간에는 상당한 정책 지향의 차이가 확인되는 반면, 자민당 내부에서는 ‘통일교적’인 정책 영역에서 의견이 다원화되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이 조사만으로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와의 연관성과 개인 후보의 정책 지향 간의 상관관계를 부정하거나 특정 짓는 것은 위험할 것이다. 무엇보다 후보 개인이 정치적 이념이나 정책적 선호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지단체의 의향이 반영되는 만큼, 지지단체 역시 이념적 혹은 정책적 지향이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선택하여 접근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통일교와의 관련성과 개인 후보의 정책 선호 간의 연관성은 ‘자율국방 지향’과 ‘보수적인 가족관’의 일치 수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1) 0(언급 없음)과 1(언급 있음)중 선택하는 설문임. 자민당 전체 평균은 0.079인 반면, 통일교와의 관련이 확인된 자민당 후보에 한정할 때 평균이 0.148로 상승했다.

## V. 결론

본 연구는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통일교'와의 관련성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자민당과 '중간 단체'로서의 종교단체 사이에 존재하는 상호의존 역학에 대해 살펴봤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통일교를 비롯한 종교단체는 자민당 의원에게 잠재적 고정표로 인식되며, 이로 인해 선거구 차원에서 유착 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유착관계는 '자민당'과 '통일교' 간의 일원적 관계로 형성되기보다는 개인 후보와 종교단체 사이의 '비공식적 제도(informal institution)'를 통해서 형성된다. '이익단체'가 지원에 대한 대가로 실질적인 정책 실현이나 예산 확보를 요구하는 것과는 달리,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정책 실현에 대한 요구가 낮기 때문에 개별 후보가 자신의 후원회에 '종교단체'를 받아들여더라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크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의원들 사이에 파벌적 특성은 찾아보기 힘든 반면, 지지기반이 취약한 후보들일수록 대거 관련성을 인정한 사실을 고려하면 정치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점이 이러한 '느슨한' 관계가 '개인'을 중심으로 확대될 수 있었던 배경이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정책 지향을 살펴보면, 통일교와의 관련성을 인정한 자민당 후보와 자민당 내의 다른 후보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UTAS 조사 결과에는 당선되지 않은 후보의 응답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 또 아사히신문의 실태조사에서는 반대로 낙선한 후보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위 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자민당 후보의 정책 선호와 통일교가 제시한 정책 제안 간의 유사성은 일정 정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만 통일교의 영향력이 자민당 후보의 정책 선호 형성을 결정적으로 좌우하지는 않는다는

주장은 제기할 수 있다. 통일교가 주장하는 보수적인 가족관, 즉 동성혼이나 부부별성제 등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민당 내부에서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에 다소간의 격차가 확인되지만 이러한 ‘가족관’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일본회의와 같은 우파 단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경향 역시 통일교와 강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추측하기에는 부족하다.

종교적 동원이라는 관점에서 자민당과 통일교의 유착 관계는 개인 후보자와 중간 단체 간의 느슨한 연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정치개혁과 경제 붕괴 이후, 나아가 2009년 실각 이후 자민당과 개인 후보는 기존의 지지기반을 재건할 필요성에 직면했다. 기존의 표 모으기 전략이 중간 단체 후퇴와 같은 위기를 맞이하면서 ‘비용이 들지 않는’ 종교단체와의 접근 역시 강화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성은 한 번 형성되면 쉽게 깨지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당선 횟수가 늘어날수록 투명성이 떨어지는 유착 관계로 변용될 여지가 크다. 그런 면에서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을 계기로, 통일교를 비롯한 ‘중간 단체’를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 후원회에 무분별하게 흡수한 것에 대한 대가를 크게 치르게 되었으며, 이는 바꾸어 말하면 연원이 오래된 ‘정책 없는’ 선거 경쟁의 실태를 드러낸 것이었다고도 할 수 있다.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23년 4월 3일

논문 심사일 : 2023년 5월 5일

게재 확정일 : 2023년 5월 15일

## 참고문헌

### 〈영어 문헌〉

Axel Klein, "Twice Bitten, Once Shy: Religious Organizations and Politics after the Aum Attack," *Japanese Journal of Religious Studies*, 39-1(2012).

Axel Klein and Steven Reed, "Religious Groups in Japanese Electoral Politics," in George Ehrhardt, et. al. (eds). *Komeito: Religion and Politics in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12).

Christopher Raymond, "The continued salience of religious voting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Great Britain," *Electoral Studies* 30-1 (2011).

David Martin, "Notes towards a General Theory of Secularisation," *European Journal of Sociology*, 10-2(1969).

Geoffrey Layman and Edward G. Carmines, "Cultural conflict in American politics: religious traditionalism, postmaterialism, and US political behavior." *Journal of Politics* 59-3 (1997).

Gerald L. Curtis, *Election Campaigning Japanese Styl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1).

Jeremy Menchik, "Beyond Secular Democracy: Religion, Politics, and Modernity,"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20(2018).

Peter L. Berger, *The Sacred Canopy: Elements of a Sociological*

Theory of Religion (Garden City, NJ: Doubleday, 1967).

Ronald Inglehart and Baker E. Wayne,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the Persistence of Traditional Valu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1), (2000).

Sohn Sukeui, “Sustaining Coalition through Adaptive Electoral Alliance: Kōmeitō’s local adjustment mechanism in electoral cooperation with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26-2 (2019).

Willy Jou and Endo Masahisa, “Presidentialization of Japanese Politics? Examining Political Leader Evaluations and Vote Choice,” *Japanes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16(3), (2015).

#### 〈일본어 문헌〉

大嶽秀夫, 「第3章 都市圏における個人後援会の変容と再編」大嶽秀夫編『政界再編の研究—新選挙制度による総選挙』有斐閣, 1997.

小熊英二, 『「民主」と「愛国」—戦後日本のナショナリズムと公共性』, 新曜社, 2002

塚田穂高, 『宗教と政治の転軸点 保守合同と政教一致の宗教社会学』, 花伝社, 2015.

中北浩爾, 『自民党政治の変容』NHKブックス, 2014.

朴喆熙, 『代議士のつくられかた—小選挙区の選挙戦略』文春新書, 2000.

待鳥聡, 『政治改革再考—変貌を遂げた国家の軌跡』新潮選書, 2020.

山田真裕, 「第4章 農村型選挙区における政界再編および選挙制度改革の影響

www.kci.go.kr

一茨城新2区、額賀福志郎を例として」大嶽秀夫編『政界再編の研究—新選挙制度による総選挙』有斐閣, 1997.

## 〈인터넷 자료〉

東京大学谷口研究室・朝日新聞社共同調査(The UTokyo-Asashi Survey),  
2021. <http://www.masaki.j.u-tokyo.ac.jp/utas/utasindex.html#2021>

『朝日新聞』, 「旧統一教会との関係は 国会議員・知事アンケート」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93632WQ93ULZU00M.html?iref=special\\_unificationchurch-survey](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93632WQ93ULZU00M.html?iref=special_unificationchurch-survey).

「自民党と旧統一協会、共鳴の半世紀：岸信介首相から続く歴史」, 『朝日新聞デジタル』, 2022.8.6.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865F5CQ82UTFK01L.html> (검색일: 2022.11.10.).

『# 山口環境大臣に祝電を頼もう』トレンド入り 旧統一教会イベントに祝電送った事実問われ「頼まれたら全部出す」と笑みを浮かべ発言」 『東京中日スポーツ』, 2022.8.6. (검색일 2022.11.17.) <https://www.chunichi.co.jp/article/521944>

『「10万票を切ることはない」旧統一教会が支えた安倍派候補』, 『朝日新聞デジタル』, 2022.8.7.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Q86728DQ85UTIL04X.html> (검색일: 2022.11.10.).

「細田衆院議長 旧統一教会関係団体と関係 会合やインタビュー」 『NHK政治マガジン』, 2022. 9. 29.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89805.html> (검색일: 2022.11.20.).

「旧統一教会の関連団体 自民党議員と「推薦確認書」取り交わす」 『NHK政治マ

マガジン』, 2022.10.20.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90805.html> (검색일: 2022.11.20.).

「旧統一教会の関連団体 自民党議員と「推薦確認書」取り交わす」『NHK政治マガジン』, 2022.10.20.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statement/90805.html> (검색일: 2022.11.20.).

「大串デジタル副大臣 旧統一教会関連団体「推薦確認書」に署名」『NHK政治マガジン』, 2022.10.26.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91142.html> (검색일: 2022.11.20.).

「木原官房副長官 旧統一教会の関連団体から推薦状受領で陳謝」『NHK政治マガジン』, 2022. 10. 28.

<https://www.nhk.or.jp/politics/articles/lastweek/91247.html> (검색일: 2022.11.20.).

Abstract

## Liberal Democratic Party and Its Religious Mobilization

Sukeui Soh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ationality behind the associations between Japan's Liberal Democratic Party (LDP) and the 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 (widely known as the Unification Church, hereafter UC).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politicians perceive religious organizations as potential source of organized votes, which becomes the incentives for both sides to develop interdependence through 'informal institutions'. While the Asahi Shinbun survey did not reveal any factional bias among those who admitted associations with the UC, the likelihood was higher for those whose electoral bases were weak. The individual LDP representatives maintained 'loose' connections with the religious organization within their districts because of the low cost of maintaining them. Furthermore, while the LDP and the UC share similar policy preferences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and 'family values,' no significant gap was found between those who were associated with the UC and those who were not. This paper demonstrates that it was largely the electoral rationality that urged the individual LDP representatives to incorporate organized votes from religious organizations, rather than the proximity of policy preferences.

Key words

Liberal Democratic Party (Japan), Unification Church, religious mobilization, electoral mobilization

www.kci.go.kr